

광주·전남 지방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파헤친다

SOCIETY

2025년 9월 1일 월요일

경찰,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압수수색...증거물 확보

여행사 관계자 등 입건...영수증 위조·과다 청구 혐의

〈속보〉해의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 기초의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본보 7월29일자 5면〉

경찰 수사로 출장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예산 투명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3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오전 국의 출장비를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 서구, 광산구

의회 사무국 3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청은 이날 사무국 사무실에서 국의 출장을 담당했던 직원의 컴퓨터를 비롯해 휴대전화 등 혐의 입증에 위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청은 압수를 분석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재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 10명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

건된 상태이며, 광역·기초의원의 입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지난달부터 각 의회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들은 지방의원 국의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 청구하고, 차액을 다른 경비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구의회의 경우 당시 여행사가 의회에 제출한 영수증의 1인당 항공료는 270여만원이었으나 원래 금액과 100여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광주시의회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제외됐

지만 추후 압수수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남경찰청도 유사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남도의회와 15개 기초지자체 의회를 대상으로 사무국 직원 및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들 역시 출장 시 항공료 영수증을 조작해 예산을 부풀린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의원 국의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시의회가 8건의 출장 중 2건에서 항공권을 실제 경비보다 300만원 가량 과다 지급했고, 광산구의회 3건(1000만원), 동구의회 2건(400여만원)도 과다 지급한 사례로 적발됐다.

서구의회도 2건에서 1600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직원 여비 40만원을 대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일부 의회는 국의 출장 시 항공권 발권을 여행사에 위탁해 운영한 점, 항공권을 위·변조할 수 없다는 점, 출장 심사위원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점 등을 토대로 권익위 조사 결과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영광 SRF 열병합발전 법인 ‘사업 불허 배상’ 패소

전남 영광 폐기물 연료 발전사업자가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지자체를 상대로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영광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이하 영광열병합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6년 영광군과 체결한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영광군에 신청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군의회 결의문 채택 등 반대 여론 확산과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영광군은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관련 방침을 살펴봤

고, SRF 공급 예정 업체가 악취 기준 초과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을 참고했다.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3년 4월 최종 승소한 영광열병합발전은 ‘부당 행정 탓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영광군을 상대로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행정청의 객관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SRF 소각의 위해성 등에 상당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



강가에서 무더위 식히는 백로 무리

31일 장성 향룡강에서 무더위에 지친 백로무리가 강물에 발을 담그고 피서를 즐기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서구 버스정류장 15곳에 ‘극우 매체 홍보 낙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찰 수사 의뢰 용의자 추적

광주 서구 버스정류장에 극우사이트를 홍보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돼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서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에 당직실로 ‘버스정류장 의사 등에 극우 매체를 홍보하는 낙서가 돼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서구는 버스정류장 등 관리 주체인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확인에 나선 공단은 금호동, 쌍촌동, 광천동 등 15여개 버스정류장에서 동일한 낙서를 발견했다.

낙서는 버스정류장 내 설치된 나무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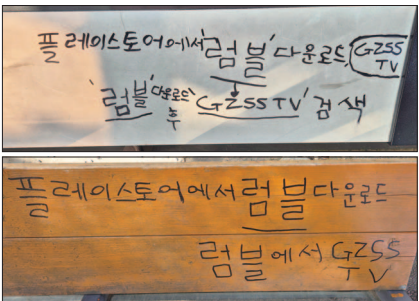
에 유성 매직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립블 다운로드’, 립블에서 GZSS TV 검색’이라는 내용이다.

GZSS TV는 극우 유튜브 안정권씨가 설립한 회사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하는 방송과 집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5일 관련 사실을 서부경찰에 신고했다.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정부



서구 버스정류장에서 발견된 극우매체 홍보 낙서.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 제141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경찰청, 내년 1월까지 ‘피싱’ 특별단속

경찰청이 올해 8000억원에 달하는 피싱 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광주 등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내년 1월31일까지 대대적 특별단속에 나선다.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국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6561건,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 95% 늘어난 수치다.

7개월 기준 역대 최고 피해액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작년 전체 피싱 피해액인 95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투자리당방(3939건·3438억원 피해), 로맨스스캠(1163건·705억원 피해), 노쇼사기(2892건·414억원 피해) 등 기타

피싱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경찰청은 5개월간 모든 수사 역량 집중, 국내외 피싱 범죄 조직과 더불어 자금세탁, 대포통, 대포통장 등까지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된 범정부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에 경찰은 전국 수사 부서에서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운영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폭 상향한 만큼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전남경찰 ‘노쇼 사기’ 예방

만년필 ○...전남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해 눈길.

31일 전남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 용해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 현금 1000만원을 입금하려던 40대 A씨를 발견.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B관공서 직원의 명함과 공문을 받은 뒤 ‘물품 구매를 하겠다. 일단 다른 업체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당시 일대에서 범죄 예방 순찰·홍보 중이었던 기동순찰대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송금을 제지해 범죄 피해를 차단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지속가능한 축제 기준은 친환경·지원 조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순환 정책포럼

최낙선 자원순환협의회 위원장 “통합가이드라인 제안”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인센티브 등 필요”

지속 가능한 축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친환경 축제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9일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일회용품 넘쳐나는 축제, 광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제2차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축제 현장에서의 일회용

품 감축과 다화용기 운영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박선영 시민자치문화센터 기획팀장의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한 실천과 기준’이란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박선영 기획팀장은 “친환경적 선언을 넘어, 숫자로 증명해야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 수 있다”며 “영국 대표적인 친환경 음악 축제 ‘삼발라 페스티벌’은 환경 지표의 측정 결과에 기반한 그린 로드맵

과 환경영향보고서를 분석해 전략을 수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덴마크 로스킬레 페스티벌은 에너지 기업 안델(Andel)과 협업해 2028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며 “축제 참가자와 기업 간의 상호교류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젤발전기, 부탄가스 사용 금지 등을 통해 매년 700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1000명 이상 축제 일회용품 금지 조례 제정 과정·실천 사례’란 주제 발표에 나선 박정은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서울시는 가정생활폐기물·1회용품 감량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다화용 컵 대여·회수·세척 체계화, 배달 다화용기 시스템 구축 등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했다”며 “2023년 4월부터 전력 사용 최소화,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홍보물·브로셔 전자책 제작, 교통 수요 유발 최소화, 인화성 물질 사용 원천 금지 등이 담긴 친환경 행사 지침 운영 계획을 지자체 주관 행사 또는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한 행사에 지침 적용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공공기관이 주최한 실내의 행사·회의 중 1일 예상 운영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전 종합토론에서 최낙선 자원순환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9일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일회용품 넘쳐나는 축제, 광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제2차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시민의 환경 인식에 맞춰 행정·사회적 인프라와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축제 쓰레기 문제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과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대다수 지역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함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분리배출 지도 표시, 다

화용기 대여소 안내, 축제 참여 식음료 부스 운영자들에게 다화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순환 정책포럼은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자원순환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호남대간호학과 동아리 오다카다 등이 공동 주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